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숙박쿠폰 50만장 배포

추석 소비촉진 대책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가 유산·미술관 무료 개방
농촌 관광상품 할인·교통비 지원

정부가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상반기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회사가 명절때 사원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비교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교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다음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엔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관광지도 새로 개방하고 입장료 등을 면제한다. 내달 14~18일 청와대를 야간 개방한다.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은 무료 개방한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추가로 1만부 발급한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이용료도 면제한다. 내달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한편, 농촌 관광상품을 할인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도 코레일톡 등을 통해 진행한다. 숲속야영장은 2027년까지 지속 확충해 60개소까지 늘린다. 코리아올레길 전 구간도 내달 최초로 개통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내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 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무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세일 이벤트도 연다. 9월에는 동행축제, 9~10월에는 가을 정기세일,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동행축제 등을 열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내달 2~13일에는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전을 열어 판매도 촉진한다.

지자체들도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자체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추석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가을 휴가를 유도에 소비 촉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 기간 안전 관리에도 힘을 기울인다. 먼저 전국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 적용해 경중 환자를 분산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408개소)에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를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응급의료시설(약 112개소)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뒤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PA 간호사 의료 행위 합법화 됐다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 통과
의료 공백 일정 부분 해소 기대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

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

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다.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양부남 84억3365만원 '최다'·정준호 -5억8808만원 '최저'

광주·전남 국회의원 재산 신고
전체 의원 평균 26억8141만원

22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26억8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양부남(광주 서구) 의원이 84억33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준호(북구) 의원이 -5억8808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47명과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43인의 재산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지난 5월 30일을 기준으로,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임기만료일인 지난 5월 29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7월 31일)까지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재산 평균은 26억8141만원이었다. 또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32인(21.8%), 5억 이상 10억 미만 17인(11.6%), 10억 이상 20억 미만 38인(25.9%), 20억 이상 50억 미만 43인(29.3%), 50억 이상 17인(11.6%)이었다.

광주에서 제22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신규 의원들의 재산 신고액은 안도걸(동남) 의원 35억 9262만원, 박군택(광산) 의원 24억6003만원, 조인철(서구) 의원 17억6149만원, 정진욱(동남) 의원 15억3638만원, 전진숙(북구) 의원 3억4889만원이었다.

전남지역구는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 27억8745만원,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11억4344만원, 조계원(여수) 의원 6억9365만원, 권향열(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 5억994만원,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 5787만원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